

■ 서평 ■

이태숙, 이종원 편,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 (아모르문디, 2009)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묻는 방식:
‘소수자’ 문제로 접근하기-

정희라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지난 9월 5일에도 영국 버밍엄시 중심가에서 반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영국수호동맹(English Defence League)’과 이들과 맞서는 무슬림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극우단체인 영국수호동맹은 “더 이상 모스크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고 이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대형 집회로 맞섰다. 결국 200여명의 군중들이 주먹싸움과 투석전을 벌였고 90명이 구속되었다.¹⁾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극우단체들과 무슬림 이민자들의 충돌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무슬림들과 유럽 주류사회와의 갈등은 오바마 정권 이후 급진 이슬람주의의 활동이 약화된 현재에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가고, 무슬림 이민자들은 서유럽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인다.

‘무슬림’이 서유럽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대략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부터였다. 그 이전에 무슬림 이민자들은 ‘무슬림’이라서 특별히 ‘문제’였기보다는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 또는 ‘유색인종’으로서 서유럽 사회의 이방인들이 겪는 보편적 차별의 대상에 가까웠다. 따라서 무슬림을 ‘문제’로 만든 요인이 오늘날 서유럽 사회의 무슬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서유럽 무슬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의문을 던지며 새로운 접

1) <무슬림 확산…….몸살 앓는 유럽 이슬람사회화 공포감, 유럽 거리 곳곳서 충돌로>, 『한국일보』, 2009년 9월 8일 기사.

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서유럽 무슬림 이민자 연구가 한국의 이주자 문제에도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연구서가 나왔다.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는 헌팅턴 이후 무슬림과 서구사회의 대립을 분석하는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문명충돌론’을 탈피하여, ‘소수자’의 문제로서 서유럽 무슬림 문제에 접근한다. 이 책은 특히 ‘문명충돌론’을 좇아 ‘문화 전쟁’과 같은 개념으로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이 책의 저자들은 ‘문명충돌론’은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을 미국의 패권과 서구의 가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화전쟁’으로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바라본다면 소수자로 차별을 받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p.23)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종교·문화적 접근의 오류는 무슬림을 종교와 문화적 측면으로 규정되는 집단으로 보는데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종교 문화적 시각은 무슬림의 사고와 행위를 이슬람에 집착한 필연적 결과로 치부하므로 실증 측면에서 오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11) 대신 저자들은 서유럽 무슬림을 ‘소수자’로 진단할 것을 제의한다. 그들을 소수자로서 접근하면 이슬람교에 귀착된 불변의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하나의 하위집단으로서 가지는 주류사회와의 권력관계 및 그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 통합’과 같은 문화적 접근에서 중시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없는 무슬림 개인이 받는 차별을 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개별정책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책의 저자들이 생각하는 ‘소수자 문제’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무슬림 이민자를 시공간의 축에서 다른 소수자 집단과도 자유롭게 비교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이슬람주의』에서 서유럽 무슬림 문제는 소수자 관련 ‘법률’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지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와 법률적 차별의 문제가 이 책의 핵심이자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그간 서유럽 이민자 관련 연구들이 반차별법이나 인권법 등을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소홀히 다룬데 비해 소수자 관련 법률들을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리고 서유럽 각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면밀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살만하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제 1부에서 소수자 관련 법률을 통해 서유럽 무슬림 문제가 재조명된다.

제 1부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는 4명의 국내 서양사학자와 1명의 법학자에 의해 유럽연합 및 영국, 프랑스, 독일의 소수자 인권 관련 법률을 논한다. 영국의 경우 ‘인종관계법’ 및 ‘인권법’과 ‘평등법’이 분석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국적법’이 다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소수자인 무슬림 부모가 가지는 ‘교육권’에 대한 평가와 종교의 자유 및 국가 중립성의 원칙이 무슬림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노력에 관한 연구도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국가 경계 안에서 그리고 탈국가적 범주에서 관련 법률들을 분석한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무슬림의 법적 권리와 그 변화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무슬림과 관련된 법의 범위를 넓혀서 고찰해야한다”(p.15)는 연구자들의 의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법률해석이 각 연구들이 한 책에 묶여야 하는 관련성과 당위성을 떨어뜨리는 인상을 준다.

일단 비교연구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쳐 두고 책의 1부에서 소개된 5편의 개별 연구논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김종원의 글 「유럽연합과 유럽의 무슬림」은 ‘탈국가화’ 시대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무슬림 이민자의 실태와 무슬림 소수자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률적 해결책을 고찰한다. 2000년에 발행된 유럽연합의 ‘인종 평등 지침’이 구체적으로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추적함으로써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노력과 개별 국가의 법률적 노력을 연결 지어 주었다. 그간 연구들이 유럽연합의 법률과 국가별 법률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비해 두 법률 체제 사이의 소통 과정을 보여준 점을 높이 살만 하다. 이러한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문제 중 특히 무슬림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태숙의 글 「영국 소수자 권리법의 전개와 무슬림」은 영국의 반차별 법인 ‘인종관계법’을 중심으로 한 소수자 권리법의 전개 과정을 영국 정부, 유럽연합, 무슬림이라는 삼각 축 속에서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소수자인 무슬림이 법률 개정에 적극적 주체가 되어 로비 활동 등을 벌인 점은 법률이 ‘위로부터의 산물’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무슬림들의 반차별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지를 펴는데 굳이 일종의 가설로서 제시한 폐처와 소파의 주장이 필요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명숙의 논문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은 “외국인에게도 국적을 개방하고 시민적 자유를 공유한다는 보편주의 이념”은 프랑스 공화국의 강력한 상징적 가치로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신화였음을 역설한 흥미로운 글이다. “근대 프랑스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강조되는 동화주의 모델은 절반만 진실”이었다는 것이다.(p.110) 외국인, 특히 북아프리카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감정과 법적 논리는 ‘국적법’이라는 프랑스 공화국 국민을 규정하는 법률에 애초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논문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프랑스 사례에 해당하는 이 장에서 영국과 독일의 반차별주의 법률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찾을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 글이다.

박규정의 「독일 사회와 무슬림 터키 공동체」와 강태수의 「독일 무슬림의 종교의 자유」는 독일의 무슬림 문제를 역사학자와 법학자의 시각에서 각각 바라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박규정은 여러 국가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를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적 상부구조에 종속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터키 무슬림 공동체라는 특정 지역 출신의 무슬림에 한정하여 그들의 공동체 형성 과정과 법적 문제들을 논한다. 그런데 독일 무슬림 이민자의 절대다수를 터키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터키라는 ‘에스니스티’를 면밀하게 드러내고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독일의 일반적인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서술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 터키 본국에서 무슬림 공동체 내의 종파적, 지역적 차이가 독일 거주 터키 이민자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독일 사회에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초래하는지 등에 대한 역사문화인류학적인 접근과 분석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 또한 터키 무슬림 공동체와 타지역 출신 무슬림 공동체가 독일 사회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독일의 외국인 정책에서도 터키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고려 및 차별정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저자들 중 유일한 법학자인 강태수는 흔히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적 충

돌' 지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축도살', '학교에서의 예배와 종교적 상징물', '교사의 허잡 착용', '무슬림의 체육 수업', '이슬람 종교 수업'에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판례 검토를 통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떠한 법적 논리로 독일 사회에서 규정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유익한 부분이다. 강태수의 논문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기독교적 전통에 의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소수자가 법률적 측면에서도 결국 종교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한 법적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책이 설정하고 있는 종교문화적 접근을 거부하고 소수자의 문제로 무슬림 이민자 문제를 본다는 것이 너무 제한적인 접근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들게 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 책의 마지막 1/5부분은 1부와는 별개의 주제인 2부 '급진 이슬람주의'에 할애된다. 역사학자인 팔레스타인 베들레헴대학의 아드난 무살람(Adnan Musallam) 교수의 글 「사이드 쿠틀, 아이만 알자와히리 그리고 알카에다」와 무살람 교수의 책 『세속주의에서 지하드로』에 대한 서평인 한명숙의 글 「급진 이슬람주의의 사상적 기원」이 책의 2부를 구성하면서 이 책의 가치를 한껏 높여준다. 무살람의 논문과 한명숙의 서평은 짝을 이루며 그간 급진 이슬람주의의 활동을 뉴스 보도를 통하여 접하면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역사적 실체와 급진 이슬람주의의 사상에 대해 궁금했던 많은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무살람 교수에 따르면 '사이드 쿠틀'은 급진 이슬람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집트인이었던 쿠틀이 나세르 대통령의 세속적 정치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퍼낸 급진적 저술들이 이슬람 세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급진 이슬람주의로 탄생한다. 예를 들어, 알라에 진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하드'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공동체나 신앙이 공격당했을 때 요구되는 집단 의무"로 해석되지만 쿠틀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탈바꿈한다.(p.227) 쿠틀의 사상이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의 스승격인 압둘라 아잠의 지하드주의로 구체화되고, 빈 라덴 및 알자와히리가 계승하여 알카에다를 부활시킨 과정을 추적한 역사학자 무살람의 업적이 돋보인다. 쿠틀의 영향력은 한명숙의 서평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필리핀, 유럽, 알제리, 팔레스타인의 급진 이슬람단체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 급진 이슬람주의와 제1부의 주제인 서유럽 무슬림 문제와의 관련성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서유럽의 무슬림 문제는 이주자의 문제이자 소수자의 문제로서 급진 이슬람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별개의 주제로 취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의 런던테러와 같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서유럽 무슬림 이민자 2세대들이 급진 이슬람주의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 영향력은 무슬림 이주자와 주류 사회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저자들이 고려해 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서유럽 무슬림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소수자 문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출발하여 양질의 논문의 결과를 얻은 이 책의 저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여진 저자들의 논문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 일관되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갔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필자는 공동연구가 가지는 제약과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제 1부의 각장에서 연구된 무슬림 소수자 관련 법률들이 각국에서 ‘반차별법’과 ‘국적법’ 등으로 동등한 비교대상을 통해 분석되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무슬림 이민자들을 ‘교육’, ‘종교적 자유’, ‘인권’ 등 공통의 범주 안에서 고찰해 주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스쳐간다. 『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는 비교연구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은 돋보이나 비교대상을 가로지르는 분석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다소의 산만함을 보이는 책이다. 그렇지만 분명 필자는 서유럽 무슬림 문제와 이주자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접근 방법의 차이 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연구들이 ‘문명충돌론’의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문화종교적 접근’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 하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이 책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무엇이 서유럽 무슬림들을 ‘문제’로 만들었는지 하는 문제는 문화종교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10년간 서유럽 각국의 언론을 통해서 무슬림은 ‘위협’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주간지 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유럽 무슬림 인구는 2배 증가했으며, 2050년이 되면 유럽인 5명 중 한명이 무

슬림일 것”이라고 한다.²⁾ 그리고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장 흔한 남아 이름 ‘탐 7’이 무함마드, 아담, 라이안, 아유, 마흐디, 아민, 함자라고 한다³⁾. 이러한 기사가 유럽인들에게는 어떤 담론체계를 통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서유럽 주류 사회가 그들의 ‘타자’로 주목하고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관심과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슬림을 ‘문제’로 보는, 그리고 ‘문제’로 만드는 담론에는 분명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 문제로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지라도 이러한 차이의 담론에 내재한 문화종교적인 갈등의 고리를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이 책의 접근방식과는 대조적으로 서유럽 무슬림 문제를 ‘문화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보여주는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을 함께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두 책을 통해 같은 문제를 다르게 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끼고, 상호보완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알게 되는 재미 속에 빠져들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e-mail:heerachung@hanmail.com

2) “A Fifth of European Union will be Muslim by 2050”, 8 August 2009, *Telegraph*.

3) “Muslim Europe: the demographic time bomb transforming our continent”, 8 August 2009, *Telegraph*.